

시론



성낙인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前)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 거는 기대

2022년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대통령선거는 3월 9일 이외에 몇 가지 요소를 추가한다. 즉 3월 4일·5일 양일 간 사전투표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선거일이 사실상 3일이다. 실제로 사전투표율(36.94%)은 날로 증가한다. 심지어 사전투표율이 51.4%에 이르는 지역(전남)도 있다. 이에 추가하여 해외 부재자투표가 있다. 9일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였지만, 사전투표와 해외 부재자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였다. 치열한 선거과정을 거친 끝에 70년을 넘어선 대통령 직선제 역사에서 최소득표율 차이로 나타났다. 선거결과는 새 대통령의 길을 미리 밝혀주는 징표이다. 초반빙에 더하여 국민적 정당성의 또 다른 축인 의회권력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정치적 타협과 통합 그리고 협치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선거는 세대교체의 의미를 가진다. 주요 정당 4명(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의 안철수(중도사퇴), 정의당의 심상정)의 후보가 모두 고교 평준화 세대이다. 연령과 세대의 차이는 외관상의 차이를 넘어서서 사고와 패러다임의 전환을 초래할 수 있다. 그간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명문고 중심의 파워 엘리트가 지배하여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평준화 세대는 파워 엘리트의 새로운 지형을

형성할 수 있다. 그들이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이너 서클을 형성할 때 펼쳐질 그 향방과 장·단점이 자못 궁금하다.

첫째, 당선인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관통하여야 한다. 세계는 지금 팬데믹(Pandemic)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정부정책의 방향은 회고적인 양태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87년 체제에서 10년의 정권교체(alternance) 주기가 5년 단임 주기로 단축된 현상을 우연한 결과로 치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격변의 시대 상황에서 국민들이 새 시대에 부응한 새로운 리더십을 원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과거에 집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위 적폐로 상징되는 과거에 대한 응징은 정의의 이름으로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정의를 빙자한 적폐청산이란 결국 과거로의 퇴행적 회귀일 뿐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당선인은 문 정부에서 적폐청산의 주역 중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5년 내내 적폐청산에만 매몰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문 정부의 실패가 바로 윤 당선인에게 비추어진 거울이어야 한다(過猶不及). 당선인은 같은 정권에서 구현하려던 적폐청산에 동승하여 승승장구 출세하였지만, 말을 갈아타고 적폐청산의 대상이던 야당 후보로서 입신하였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和而不同).

둘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검찰총장이 직선 대통령이 된 최초의 사례이다. 당선인의 경력은 오직 26년의 검사직뿐이다. 정치인으로서의 변신 후 1년 만에 야당 대통령후보경선을 거쳐 일약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기개로

부터 비롯된다. 하지만 국가경영이란 검사직과는 확연히 다르다. 검사란 과거에 발생한 범죄를 척결하기 위하여 “정의의 칼”을 휘두르는 직업이다. 하지만 국가경영에는 과거를 거울삼아, 오늘을 진단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형성적 사고와 결단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사실은 대통령이란 국가의 상징이자 국가원수로서 “정의로운 지혜”보다는 온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덕’(德)이 필요하다. 일찍이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서도 ‘법치’보다는 ‘덕치’가 최고의 통치술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갈라치기’된 우리 사회를 “‘선’(善, virtus)한 사람들의 공동체”로 인도하여야 한다. 국가경영을 자신의 검사 경력에 투영하여 수행한다면 그것은 치명적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 “강골 검사 윤석열”은 잊어라. 또한 자신의 출신 배경인 검찰 더 나아가 사법에 관한 개입도 자제하여야 한다. 자신이 잘 아는 조직일수록 절제의 미덕으로 임하여야 한다. “오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경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셋째, 큰 귀를 가져야 한다. 당선인은 수많은 사람을 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간신과 충신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토사구팽(兎死狗烹)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선거과정에서 고생한 인사들의 국가경영 참여에는 옥석을 가려야 한다. 개인적 인연을 떠나 적재적소에 능력있는 인재를 널리 구하여야 한다. 이름하여 대권(大權)을 차지한 대통령을 범접하기란 쉽지 않다. 대통령제의 특성상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서도 아니 되고 숙일 필요도 없다. 대통령은 단순히 행정수반이 아니라 국가원수이기 때문이다. 그 대통령을 향하여 ‘쓴소리’를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신의 언

행이 자칫 대통령의 심기라도 불편하게 한다면 그에게 무슨 불이익이 닥칠지 모른다고 걱정하기 마련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가까운 지인들이 사석에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스스로 조성하여야 한다. 넓은 도량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대통령은 소통의 자리를 많이 만들수록 좋다. ‘혼밥’, ‘혼술’보다는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 자리에서 대통령은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열린 자세와 언행에 따라 그날 그 자리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다.

넷째, 당선인의 화두는 통합과 변영이었다. 무엇보다 ‘통합’이 우선이다. 지난 정권뿐만 아니라 당선인도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갈라치기 행태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혜로운 국민은 2020년에 이미 의회권력을 더불어민주당에 부여하였다. 2022년에 집행권력은 야당 후보인 당선인에게 부여하였다. 이른바 미국식 분정정부(分占政府, divided government)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는 현실을 직시하는 실존적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망된다. 국민적 정당성의 두 축인 정부권력과 의회권력의 분점은 주권자가 내려준 결단이다. 정부권력과 의회권력의 균형을 흐트리는 쪽은 결국 국민적 신망을 상실하기 마련이다. 이제 통합, 소통, 화합, 협치, 배려 없이는 국정의 순조로운 작동을 보장할 수 없다.

헌법상 국회의 필수적 사전동의를 요구하는 국무총리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면 정부구성이 불가능하다(제86조 제1항). 1998년 소위 DJP 연합정권이 김종필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의 불발로 사상 초유의 평화적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정부를 구성할 수 없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때 의회 다수당은 바로 국민

의힘의 전신인 신한국당이였다. 대선 직전 무조건적인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하고 국민의당과 협치를 보여준 것처럼, 다음 단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것이 이 시점에서 윤 당선인에게 주어진 국민의 명령(命令)이자 업보(業報)로 받아들여야 한다. ‘변영’만이 국민적 지지를 담보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책무를 한시라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영 곧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길만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 소통, 협치, 화합이 모든 것은 국가변영과 국민행복을 위한 과장상의 도구일 뿐이다. 통합과 변영은 궁극적으로 “이밥에 고깃국”에 목말라하는 북녘 동포와 함께하여야 한다. 통일은 단순히 국정과제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달려있는 문제이다. 통일대업을 향한 주춧돌 쌓기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아직도 유효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기초하여 “햇볕정책”도 강화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면서, 실타래처럼 꼬인 한일관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4강외교의 선순환적 작동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다.

끝으로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식에 선서할 내용을 5년 후 퇴임할 때까지 언제나 되새기길 바란다(헌법 제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